# 메모리반도체 핵심 인재 중용… 부사장 39명 등 131명 승진

**삼성그룹 정기 임원인사**

**로봇 등 기술 중심 경영체계 강화**
**삼성전자, 실적·수주성과 기반 인사**
**삼성전기, 임원 승진 지난해 두배**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뉴시스

삼성그룹 주요 전자 계열사가 정기 임원인사를 통해 기술 중심의 경영체제를 강화했다. 삼성전자는 승진 규모를 줄이면서도 반도체 핵심인재를 중용했으며 부품 계열사는 AI 서버용 부품과 차세대 OLED 사업을 이끌 기술인재를 발탁했다.

24일 삼성전자는 부사장 39명, 상무 78명, 펠로우(Fellow) 2명, 마스터(Master) 12명 등 총 131명을 승진시키는 2027년도 정기 임원인사를 발표했다. 다만 이는 지난해보다 30명 줄어든 규모다.

**◆삼성전자, 반도체 성과주의 인사…AI·로봇 인재 발탁**

이번 인사의 핵심은 삼성전자의 실적 성장을 이끈 메모리반도체 인재 중용이다. 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차세대 D램의 개발 및 양산 경쟁력 확보에 기여한 인재들이 대거 승진했다.

메모리사업부에서는 최신 D램 제품 개발을 주도한 D램설계1그룹 김명오 상무와 HBM4 개발 및 양산을 이끈 하경수 D램설계2그룹장이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사업부에서도 고객사 확보와 공정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인재를 중용했다. 수주 확대를 이끈 송태중 부사장과 4·5나노 공정의 수율과 성능을 개선한 이호 부사장, 핵심 설계자산(IP) 개발을 주도한 류효겸 부사장이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디바이스경험(DX)부문에서는 미래사업 육성에 무게를 뒀다. 인공지능(AI)·로봇 분야 인수합병(M&A)과 투자를 담당한 마띠유 아포테커 부사장과 웨어러블 기기 개발을 주도한 조익현 부사장이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로봇 사업의 핵심 기술을 확보한 인재도 발탁했다. 로봇 하드웨어 시스템 개발을 담당한 형승용 상무와 휴머노이드 보행 및 전신제어 기술을 개발한 구동한 상무가 신규 임원에 올랐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여성 승진자가 11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AI 기반 데이터 플랫폼 개발과 운영을 담당한 이윤경 빅데이터센터장이 부사장으로 승진했으며 생활가전과 메모리사업부에서도 여성 신규 임원을 배출했다.

**◆삼성전기·삼성디스플레이, 주력 사업 기술 경쟁력 강화**

삼성전기는 AI 서버용 부품 사업 확대에 발맞춰 임원 승진 규모를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렸다. 부사장 5명, 상무 8명, 마스터 2명 등 총 15명이 승진했다.

이번 인사는 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 패키지기판 등 주력 제품의 기술 차별화와 신규 고객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삼성전기는 AI 서버용 부품 공급 확대에 힘입어 올해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사업 성장에 맞춰 회사는 지난 9월 6조7800억원 규모의 패키지기판 증설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달에는 엔비디아와 차세대 그래픽처리장치(GPU)용 기판 공급 확대 및 MLCC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역시 차세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시장 확대에 대응해 제품 개발과 양산 경쟁력 확보에 기여한 인재를 중용했다. 승진자는 부사장 5명, 상무 9명, 마스터 2명 등 총 16명이다.

대형디스플레이사업부에서는 퀀텀닷 유기발광다이오드(QD-OLED) 공정 효율을 높인 송하정 BP기술팀장 겸 기술혁신팀장과 세계 최초 8.6세대 올 옥사이드(All Oxide) IT용 OLED 양산에 기여한 안기완 개발실장 겸 IT개발팀장이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신규 제품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인재도 발탁했다. 차량용 OLED 패널 성능을 개선한 이성준 공정개발팀 부사장과 북미 주요 고객사의 폴더블 제품 양산에 기여한 최지훈 품질보증실 A품질팀장이 대표적이다. 최 팀장의 승진으로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에 이어 40대 부사장을 배출했다.

한편 삼성 주요 전자 계열사는 이번 임원인사에 이어 조만간 조직 개편과 보직인사를 확정할 예정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 "석유 최고가격제, 단계적 출구전략 마련해야"

**에너지경제硏 'K-석유안보' 현안 점검**
**"종료기준 사전에 공표해 혼란 줄여야"**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24일 서울 중구 르메르디앙 서울 명동에서 열린 '호르무즈 사태, K-석유안보 정책 성과와 과제' 조찬포럼에서 국내 원유 수급 대응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유혜온 기자

중동 전쟁 이후 정부의 석유 수급·가격 안정 대책을 지속 가능한 안보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을 상시화해 중동 의존도를 구조적으로 낮추고, 최고가격제는 시장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4일 서울 중구 르메르디앙 서울 명동에서 '호르무즈 사태, K-석유안보 정책 성과와 과제' 조찬포럼을 열고 정부와 정유업계의 위기 대응 성과와 중장기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 원유 수급 위기 대응 선방…다변화 지원 상시화해야**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가 본격화한 지난 4~5월 한국의 원유 도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다. 비축유 활용 위주로 대응한 일본(52%)보다 감소율이 30%포인트 낮았다.

국내 정유사의 다양한 유종 처리 역량과 정부의 비중동산 원유 운임 차액 지원 확대가 미국·남미 등 대체 원유 확보에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비축유 스와프(누적 3200만배럴)와 정유사 비축 의무 완화(40일→20일)도 수급 안정에 기여하면서 정유사 가동률은 사태 이전과 유사한 수준을 회복했다.

문제는 다변화의 지속 가능성이다. 통상 70% 수준이던 중동산 원유 도입 비중은 지난 1~8월 62%로 낮아졌다. 그러나 정제설비 특성과 운송비 측면에서 중동산 원유의 경제성이 높아 정책적 지원 없이는 기존 수준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공급망 위기 시 비축유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평상시 도입선을 다변화해야 한다"며 "정유사가 장기 조달·설비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운임 차액 보전 현실화와 지원 요건 완화 등 다변화 지원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원 배분 개선도 주문했다. 내년 출범 예정인 자원안보기금 예산 약 2조4000억원 중 석유 공급망 투자 비중은 15%에 불과하다. 석유 수입부과금이 본래 목적인 수급·가격 안정에 쓰이는지 점검하고 공급망 투자와 에너지 전환 재원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정화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장은 높은 중동산 원유 의존도를 대표적인 시장 실패 영역으로 규정했다. 정제설비 개선과 원유 혼합·정제 기술 연구개발(R&D), 다변화 지원 등을 통해 자원안보 기본계획상 오는 2035년 중동산 원유 도입 비중 50% 목표 달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 최고가격제, 가격 안정 성과에도 시장 왜곡… 유통시장 부작용**

정부는 지난 3월 13일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최고가격제를 도입하고 유류세 인하와 착한주유소 제도를 병행해 왔다.

장태훈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3~9월 국내 휘발유·경유 세전 공급가격은 국제 제품가격을 한 차례도 웃돌지 않았으며 같은 기간 유류세 인하에 따른 재정 부담은 약 1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다만 "가격 억제로 시장의 수요 조절 기능이 약화했다"며 "4~9월 국내 휘발유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하는 데 그쳐 연방정부 차원의 가격 개입이 없었던 미국(2.5%)보다 감소폭이 작았다"고 지적했다.

유통시장에서도 부작용이 나타났다. 국내 연료용 석유제품의 절반 이상이 대리점을 거치는 가운데 최고가격제 시행 초기 저가 현물 공급 차질로 대리점의 유통 비용 부담과 영세주유소의 물량 확보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오피넷 가격 미보고로 일시 영업 중단이 추정된 주유소는 59곳으로 전월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전쟁 이전 일반 주유소보다 *l* 당 약 50원 저렴했던 자영 알뜰주유소의 가격 경쟁력도 약화하면서 기존 유통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 부연구위원은 "정책 장기화에 따른 비용 누적과 일시 폐지에 따른 시장 혼란을 고려해 단계적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내외 시장 동향을 반영한 종료 기준을 사전에 공표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

# 정부,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막는다

**전용 시험장 확대·감독관 보디캠 의무화**
**노동부, 신뢰성·공정성 회복 역량 집중**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학별 고사·내신 및 국가자격시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보고하고 있다. /뉴시스

향후 국가자격시험만을 전담하는 시험장이 늘어나고 각 시험장 감독관은 부착식 카메라(보디캠) 착용이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스마트안경·초소형카메라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

시험 전·중·후 전 과정에 걸친 대응체계 강화가 골자다. 당국은 블루투스 신호를 감지하는 스마트앱을 활용해 부정행위 적발에 나설 방침이다. 매 과목 시험 시작 전 무작위로 수험생에 전화를 걸어 전원이 차단됐는지 재확인한다.

지난 21일 경비지도사 시험에서 즉각 적용한 결과 태블릿PC·스마트워치 소지, 휴대전화 전원 미차단 등 총 6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정부는 예산 확보와 법 개정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 내에 추가적인 보완 대책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후 적발을 위해 전용 시험장을 확대하고, 임차 시험장에는 이동형 폐쇄회로(CC)TV와 감독관 보디캠을 도입해 시험 현장을 사후에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강구한다.

또 스마트기기 전담 감독관을 확대 배치하고 주기적인 교육과 실습을 통해 전문 인력풀로 관리한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를 도입은 물론,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도 기기를 탐지할 수 있는 비선형접합탐지기 등 추가 적발 수단도 확보한다.

시험 결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선 수석·차석 합격자 점수, 전체 수험생의 평균 점수와 과목별 득점 분포를 공개한다. 부정행위가 적발될 시 기술자격의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린다. 형사처벌 역시 2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세무사·노무사 시험과 같은 전문자격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응시 제한 기간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형사처벌 규정도 새로 만든다. 부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한다.

노동부는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하는 기관들과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연다. 산업인력공단의 전담 연구 기능을 강화해 협의회에서 적발 사례와 탐지 기술을 공유하며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AI 시대에 맞춰 국가자격제도 전반도 손본다. AI 시대에 걸맞게 실기형·면접형 등 시험 방식을 다양화하고, 불필요한 자격은 과감하게 정비한다. 현장 경력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인증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자격검정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부정행위에 철저히 대비하고 범죄는 끝까지 추적한다'라는 원칙을 내걸었다. 국가자격시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국가자격제도 종합점검 및 대책수립 TF(전담반)'를 통해 연말까지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